

보도자료		 www.medianetwork.kr
보도요청: 2020.3.30.(월) 11:00 부터		
담당	미디어연대	
연락처	(02) 741-7662	FAX (02) 741-7663
E-mail	mirifica@naver.com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년 13주차 발표 (3.30일)

“여당 비례대표 KBS 전 부사장 등은 공영방송에서 암약한 정당원”

- 즉각 사퇴하고 임명·위촉했던 KBS 사장과 이사회는 책임져야 -

“김일성 미화 KBS <역사저널>은 조선중앙방송의 <혁명역사저널>”

“뒷북행정 ‘외국인 입국금지’를 홍보만 하는 정권기관지 <연합뉴스>”

“여권 불법 낙선운동을 야권 계란던지기과 몰타기하는 MBC, JTBC”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지명된 KBS 정필모 전 부사장과 이창현 전 시청자 위원장은 KBS 고위직에서 특정 정당의 정당원으로 암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치중립의 공영방송 KBS의 윤리강령과 취업규칙을 분명히 위반했고 KBS 스스로 비판 보도를 했다.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들을 임명·위촉한 KBS 사장과 이사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KBS는 ‘역사저널 그날’에서 수백만 민족상잔의 주범 김일성을 미화함으로써 조선중앙 방송의 ‘혁명 역사저널’임을 자임했으며, 공영언론 연합뉴스는 ‘입국자 의무 격리조치’란 정부의 ‘뒷북 행정’을 의료진 호소 등의 비판내용 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정권기관 지로 전락했고, MBC와 JTBC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진보표방 단체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불법적 낙선운동을 아예 보도 않거나 여당 후보 사무실에 대한 계란던지기 사건에 묶어 몰타기 보도하는 등의 노골적인 여당 지지 보도로 일관했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30일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과 공영언론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3인의 대표와 박한명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3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7일간 보도 내용을 분석한 「팩트체크+ 13주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필모 전 부사장에 대해 KBS는 24일자 자체 보도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불과 한 달여 전까지 KBS의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의 이름이 올랐다. 또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도 사퇴 이틀 만에 같은 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 두 사람의 이런 행보를 두고 K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날 SBS도 “물러나자마자 정당에 줄”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씨는 명백하게 <KBS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을 위반했다. <KBS 윤리강령>은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KBS 취업규칙> 제7조에서는 정치단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KBS는 정필모 씨가 숨은 정당원으로 암약하며 공영방송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승계예비자 명단에 오르기 이틀전 해촉된 이창현 씨도 지난 2018년 29기 시청자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지난시기 KBS가 정치와 자본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사회 각계각층이 소외됨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힌 장본인인데 정작 본인이 정치판에 뛰어든 위선적 행태를 보였다.

24일 방송한 <역사저널 그날> 257회 “김일성, 군중 앞에 서다”는 김일성의 민족적 죄상을 숨기고 사소한 면을 뒤져내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19로 사회경제적 큰 위기를 겪고 있고, 김정은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위험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중대 책무를 위반했다.

연합뉴스는 이미 확진자가 만명에 육박하고 158명이란 고귀한 국민 목숨이 앓아 진 뒤에야 나온 뒤늦은 정부의 ‘전면 입국 금지조치’에 대해 그간 중국발의 원인과 책임 소재나 의료진의 눈물겨운 외국인 입국금지 호소 등에 대해서는 쏙 빼 채 보도했다.

MBC도 민주당 영입 1호인 최혜영씨의 위법적 기초생활비 타먹기 등 여권의 문제기 사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JTBC도 여당은 옹호 내지는 단순 보도, 야당은 갈등 혼란 위주의 보도로 일제히 편파적인 총선보도로 일관했다.

(후첨 : 팩트체크+ 13주차 보고서)

「팩트체크 + 13주차 보고서」

차 례

I. KBS 고위직에서 암약하다 선거판에 뛰어든 전 부사장과 전 시청자위원장

- KBS 윤리강령/취업규칙 위반
- 즉각 사퇴 후 KBS 사장·이사회 책임져야

II. KBS의 <역사저널>은

조선중앙방송의 <혁명 역사저널>인가

- 민족상잔의 대죄 김일성 미화

III. 언론사가 아니라 정치판인

MBC <뉴스데스크>

MBC가 보도않는 것과 하는 것 / 민주주의 파괴에 침묵

IV. JTBC 총선보도 편파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보수야당 입지 좁히기
/ 사회이슈도 ‘여당에 유리하게’ / 오직 ‘대통령 홍보’

V. 비판의식 내던진 정권기관지 <연합뉴스>

<입국자 격리조치> 정권홍보만
/ 비례당 민망 보도 쏟아내

VI. 정권나팔수와 야권 낙인찍기 계속하는

KBS <뉴스9>

I. KBS 고위직에서 암약하다 선거판에 뛰어든 전 부사장과 전 시청자위원장

- 정필모 씨와 이창현 씨는 KBS에서 고위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정당원’으로 암약했다고 봐야
- 보도와 편성제작을 관장하고 공정방송위원회 사측 대표를 수행하는 KBS 부사장에 정필모 씨를 임명한 사장과 이에 동의한 이사회는 책임 있어
- 독립적 지위에 있어야 할 KBS시청자위원장인 이창현 씨가 특정 정파에 가담한 것을 방관한 사장과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한 책임 있어

1. 보도 및 관련 내용

○ KBS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불과 한 달여 전까지 KBS의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의 이름이 올랐다. 또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도 사퇴 이틀 만에 같은 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 두 사람의 이런 행보를 두고 K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리포트 했다(3.24).

▶ “물러나자마자 정당에 줄”…정필모 전 KBS부사장 정치권행 비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9212>

○ SBS는 “당초 명단에 없었던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은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갑자기 8번으로 뛰어올랐다.”고 리포트 했다(3.24).

▶ 與, '더시민'에 의원 꺾주기 꿈수…'막말' 민경욱 부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1432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정필모 전 KBS 부사장과 이창현 전 KBS 시청자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KBS기자협회("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정당에 줄을 서 개탄스럽다", "30년의 기자생활과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투쟁의 날들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위한 밑천이었는지 묻는다"), KBS노동조합("공영 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또다시 상처가 남게 됐다"), KBS공영노조("정필모 씨, 이창현 씨 당신들에게 공영방송은 <권력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나"), KBS직능단체 연합 등에서 정필모 씨와 이창현 씨를 KBS 명예훼손 등 해사 행위와 일탈 행위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2. 팩트체크+

○ 정필모 전 KBS 부사장 관련

- 정필모 씨는 KBS 부사장에서 사임한지 34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8번을 배정받았다.
- 정필모 씨는 KBS의 부사장이라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가 돌연 사직한 후 곧바로 특정 정파의 일원임을 공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참담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존립 근거마저 유린했다.
- 정필모 씨는 퇴직이라는 요식 절차를 거쳐 곧바로 34일 만에 특정 정파의 소속원임을 공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직 재직 시절부터 특정 정파와 내밀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며 KBS 내부자 중에도 이에 가담한 자가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정필모 씨는 명백하게 <KBS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을 위반했다. <KBS 윤리강령>은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KBS 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은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를 업무상 지휘 통솔하는 해당 간부'를 정치활동 제한 범위에 분명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 <KBS 취업규칙>은 제7조에서 정치단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KBS는 정필모 씨가 숨은 정당원으로 암약하며 공영방송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보도와 편성제작을 관장하고 공정방송위원회 사측 대표 등을 수행하는 KBS 부사장에 정필모 씨를 임명한 사장과 이에 동의한 이사회는 책임질 의무가 있다.

○ 이창현 전 KBS시청자위원장 관련

- 이창현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8번에 올랐다가 승계예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현행 <KBS시청자위원회운영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이창현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기 2일 전인 지난 3월 21일자로 해촉된다.
- 이창현 전 KBS시청자위원장은 지난 2018년 29기 시청자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지난시기 KBS가 정치와 자본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사회 각계각층이 소외됨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본인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 <KBS 윤리강령>에는 KBS인 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임직원과 외부 진행자조차 정치와 철저히 거리를 두려 하는데, 공영방송 KBS가 공적책무를 다하도록 이끌어야 할 현직 시청자위원장이 총선에 뛰어들었

다.

- 예비 정치인 이창현 씨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와 KBS의 이익 어느 것을 중시하며 KBS시청자위원장 활동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심각하다.

- KBS시청자위원장이라는 중립적 지위에 있어야 할 자가 특정 정파에 가담한 것을 방관함으로써, KBS사장과 이사회는 국가기간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도록 길을 터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Ⅱ. KBS <역사저널>은 조선중앙방송의 <혁명 역사저널>인가

- KBS 1TV <역사저널 그날> ‘김일성, 평양 군중 앞에서다’ 프로그램
- 동족상잔이 현존하고,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 김정은의 미사일 실험이 계속 되는 위험상황
-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조차 결여된 방송

1. 방송내용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북한 정권에서 신격화, 우상화 숭배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수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 KBS <역사저널 그날> ‘김일성 평양 군중 앞에 서다’는 한마디로 ‘김일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면도 있다’ 식의 내용이였다.

▶ <역사저널 그날> 257회 “김일성, 군중 앞에 서다”(2020.03.24./화)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3-0571&program_id=PS-2020011808-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8#more

○ 김일성은 자신의 항일 투쟁 이력을 날조, 과장했고, 소련군의 꼭두각시로 정권을 차지하여 정적을 무자비하게 처단했으며,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족상잔을 일으켰고, 죄없는 북한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굶어 죽이고 때려죽였고, 수많은 테러로 대한민국을 괴롭힌 자다. 그러니 김일성의 정체성은 거짓말쟁이, 살인자, 전범, 인권범죄자, 테러리스트라 할 것이다. 그런데 KBS <역사저널 그날>은 그 중요한 사실들을 외면했다. 대신 소련군환영인민대회, 보천보전투, 토지개혁 등의 사소한 사안들을 무슨 대단한 발골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내세워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에 바빴다.

2. 팩트체크+

○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김일성은 매우 불편하고 거부감을 주고 있는 존재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고, 김정은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위험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김일성을 주제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 <역사저널 그날>은 김일성의 주요한 죄상을 숨기고 사소한 면을 뒤져내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서울에 있는 KBS <역사저널>인가,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방송 <혁명역사저널>인가. 이 프로그램은 우리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조차 결여된 방송이라 할 것이다. 끝.

Ⅲ. 언론사가 아니라 정치판인 MBC <뉴스데스크>

1. MBC가 보도하지 않는 뉴스들

○ 민주당 영입 1호인 최혜영이 결혼을 숨기고 기초생활비를 타먹다 입당 8일 전에야 신고했다는 사실

○ 열린민주당 비례 4번인 주진형이 미성년자 아들에게 한국 국적을 버리게 했다는 사실

○ 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의 야당 유력 후보(오세훈, 나경원 후보 등) 선거구에서의 선거운동 방해사건. 발생 이틀후 대구 여당 후보(김부겸 후보) 선거방해 사건이 발생하자 그 뒤에 행위자 표시도 없이 정체불명의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붙임.

▶ [정참시] 계란투척에 피켓시위...선거방해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6455_32524.html

○ 야권인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례대표 선정 논란 관련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전격적인 사과 발언. (그 직전까지 한선교 대표의 미래통합당이 공천개입 주장을 보도하다가 사과로 돌아서자 일체 보도 안함. 대부분 언론들은 주요 기사로 속보 보도)

2. MBC가 보도하는 뉴스들

○ “여 비례정당은 ‘형제’, 야 비례정당은 ‘위성’”

- 야당의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이라며 신랄히 비판해 오다가 여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는 3.25일 보도에서 ‘위성’이란 말 대신 시종 ‘형제, 가족, 사돈, 종갓집, 집안, 시대’란 낯뜨거운 우호적 표현을 사용했다. 정작 당사자인 더불어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까지 “우리는 한국당을 깨부수기 위한 민주당 위성정당”이라고 말했는데도 MBC는 ‘형제 정당’이라고 보도한다. 또 다른 보도 한 구절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이다. 정치편향의 극치다.

▶ [3.25] [정참시]<'더불어'종갓집... 민주당의 형제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6455_32524.html

○ 야당이 하면 ‘막말’, 여당이 하면 ‘고운 말’

- 3월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공천에서 기사회생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막말 논란을 두건의 기사로 연이어 보도하며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의 막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은 법무부 인권국장 때 국회에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을 ‘야차(夜叉)’ 즉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표현했다. MBC에게 여권 인사들이 하는 발언은 어떤 막말이어도 막말이 아니다.

▶ [3.24] '기사회생' 민경욱 공천...김무성 광주 공천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5916_32524.html

▶ [정참시] 민경욱 부활... 김순례·이은재 태극기행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5917_32524.html

● 민주주의가 공격 받는다는 침묵하는 MBC

[MBC노조 공감터 98호] 이제는 적색 선거폭력까지

이른바 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 소속 청년들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이들은 그동안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등 우파 후보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왔는데, 3월 23일 아침에는 아예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는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것이다.

이들이 행동 수위를 높인 이유가 있었다.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 10여 명에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므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멀뚱멀뚱 구경만 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대진연은 법도 경찰도 무서울 게 없었던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야당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이름도 민망하다.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진보’

인가? 그러면 반대파를 죽창으로 찌르면 개혁이고, 인권을 말살하면 발전이고, 누구네 혈통에 복종하면 혁명이고, 어린이는 굶어죽고 여성들은 인신매매되는 나라는 선진국인가? 어디서 누구에게 참 잘 배웠다. 그게 진보면 히틀러는 민주투사고 스탈린은 인권운동가겠다.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았는데도 평소에 진보연하던 여러 관변매체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MBC도 그러했다. 그 많은 TV뉴스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체면치레로 인터넷 단신 하나를 띄워 놓은 게 전부였다.

북한 주민들이 억압받고 궁핍한 이유가 못나고 게을러서가 아니다. 수십 년 뒤 한반도 주민들이 왜 억압받고 궁핍해졌는지 궁금하면 옛날 MBC 뉴스를 찾아볼 것 같다.

2020년 3월 23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IV. JTBC 총선보도 편파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1. 보수야당 입지 좁히기

1) 후보등록 마감 닷새 앞…비례 공천, 커지는 갈등 (3.22.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332&pDate=20200322

○ [앵커]

21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 지은 여야 양당은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따로 당을 만들어 공천을 하려다 보니까 각종 꼼수와 공천 갈등까지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여야 비례공천 갈등 소식을 전달하는 리포트. 여당에 대해선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후순위 배치에 반대한다는 것, 투표용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 기호를 받기 위한 의원 꺾주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룬 반면 야당에 대해선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의 황교안 공천 개입 주장 논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여부에 대해 다룸. 뉴스룸은 여권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당 차원의 혼선, 꼼수를 지적하면서 보수 야당에 대해선 특정 인물 중심의 갈등과 다툼 위주로 보도. 이런 보도는 여권은 선거법 등률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혼란, 혼선이지만 야권의 혼란과 갈등은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이미지를 만든다. 민주당 차원의 논란을 다뤘으면 미래통합당 역시 당 차원의 혼란을 다루는 것이 균형상 맞는 보도.

2) 미래한국당, 새 비례 명단…당선권 모두 '황교안 색깔' (3.23.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542&pDate=20200323

○ 미래한국당 포지션을 황교안 당 대표 개인 이미지로 축소시키는 보도. 야당 지지층을 좁히고 중도층과 거리를 넓히는 민심이반을 노리는 보도로 분석.

3) 영향력 잃은 '박근혜 옥중편지'…유영하, 이번에도 탈락 (3.23.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541&pDate=20200323

○ [앵커]

보수 통합을 요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발표 19일 만에 사실상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편지를 옥성으로 전한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 순번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은 총선을 앞두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 보수분열 강조. 야당 내 계파 간 분열 조장보도

4) 1·2당 위성정당에…대박 꿈꾸던 정의당, 지지율 '추락' (3.24.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750&pDate=20200324

○ [앵커]

이렇게 국회 1·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 잡기에 나서면서 정의당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대박을 기대했지만, 골목상권에 뛰어난 대기업에 지역상권이 휘청거리듯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 정의당 지지율 추락 원인에 대한 아전인수식 분석. 정의당 추락은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꿈수와 정의당이 자당 의석수 늘리기 기회로 보고 민주당 정략에 동조하며 도우미 정당으로 전략하며 자초한 오류. 그러나 뉴스룸은 이에 대한 본질적 분석 없이, 정의당이 '골목상권에 뛰어난 대기업에 지역상권이 휘둘리는 것'으로 엉뚱한 비유하며 편파보도. 정의당 눈치보기 보도.

5) 대진연 '나경원 등 낙선운동'에…통합당, 선관위에 항의 (3.25.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957&pDate=20200325

○ [앵커]

한 대학생 단체가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해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대구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에다가 40대 남성이 달걀을 던지고 갔습니다.

○ 대진연의 오세훈,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불법낙선운동과 한 시민의 김부겸 후보 사무실에 계란 던지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같은 비중의 사건으로 보도. 미 대사관 담을 넘은 충북대학생 단체 대진연의 불법 낙선운동은 이전 사례로 볼 때도 간과해선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공작임. 뉴스룸은 이 대진연의 정체, 불법성, 불법 낙선운동을 집중보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구 한 시민의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실 계란투척 해프닝과 나란히 보도하면서 대진연 사건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인상을 주는 불공정 보도. 특히 연관도 없는 대진연 불법 낙선운동과 대구시민의 민주당 후보 계란 투척 해프닝을 함께 보도하는 것은 특정 지역 혐오를 부추기고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면도 있음.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 내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회이슈도 '여당에 유리하게'

1) "n번방 분노 공감" 문 대통령, 운영자·회원 전원 조사 지시 (3.23.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584&pDate=20200323

- ▶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신상공개 여부 24일 결정 (3.23.월)
- ▶ 경찰, 'n번방' 개설자 '갓갓' 추적...8개 방서 성착취물 유포 (3.23.월)
- ▶ "문제의 '대화방' 접속자 26만 추정"...처벌 대상·수위는? (3.23.월)

▶ "음란 합성영상 혼자 즐긴 것 규제해야 하나" 발언 논란 (3.23.월)

○ [앵커]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을 찍어 돈벌이를 한 파렴치한 어른들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사방', 'n번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들입니다.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는 내일(24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조모 씨로만 부를 게 아니라 아예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0만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중략) 총선이 코앞이지만, 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총선 치르고 4월 말~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 n번방 사건을 총선에 이용한 보도에 해당. 사건의 심각성, 문제를 적극 보도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전원 조사 지시' 보도, 이어서 여당의 관련 법안 적극 처리를 부각했다. 뉴스룸은 n방 사건을 주요 뉴스로 우선 배치해, 이 점을 적극 알렸다. 여당 총선에 유리한 배치와 내용의 전형적인 사례. 정권에 불리한 (라임 사건 등) 이슈는 n번방 사건으로 묻힌 효과.

3. 변함없는 '대통령 홍보'

▶ '한국 의료장비' 요청한 트럼프...문 대통령 "여유분 지원" (3.25.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981&pDate=20200325

○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정상 간 통화에서입니다. 진단 키트를 지원해달란 요청이 세계 곳곳에서 들어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생산 업체를 직접 찾았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우한 코로나 관련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뉴스. 그러나 23일(현지 시각)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2일 유럽과 유라시아에 파견된 각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일괄적으로 "의약품과 장비를 판매해 줄 국가를 물색해보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지시가 담긴 이메일에는 "인공호흡 장비 등 수십만개 물품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만 특

별히 요청한 게 아닌데도 뉴스룸은 미 대통령이 마치 한국에게만 요청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제목으로 청와대를 홍보. 뉴스룸은 청와대발 홍보 기사가 아니라 마스크, 의료장비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료진의 고충을 취재하고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비판 기사를 냈었어야 했다.

V. 비판 의식 내던진 정권 기관지 <연합뉴스>

1.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받아 쓰기만

“비판 의식을 상실한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출발지·국적 안 따진다"…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종합)(3.29 19:06)

▶정부, 후베이성 입국금지 57일만에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단행(3.29 19:36)

○ 정부가 마침내 입국 제한을 대폭 확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요일인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례 브리핑 설명대로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조치에서 번번이 뒷북을 치고 있는데도 연합뉴스는 정부가 불러 주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은 한술 더 떠 정부의 자화자찬을 확대 재생산하며 ‘문(文)비어천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느 매체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뉴스통신사라가 아니라 정부의 기관지로 자리매김한 느낌이다. 전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라는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쳤으나 ‘상황 종식’ 운운하며 콧방귀만 꺾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그때야 마지못해 행동에 나섰는데도 연합이 문비어천가에만 매달리던 지난달과 판박이다.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국민 158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은 뒤에야 나온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는 학회 등의 집단 건의 형태로만 십여 차례에 달했고, 전문가와 언론계는 수도 없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망언(박 장관)까지 서슴지 않으며

완강히 버텼다. 중국이 일본은 쏙 빼고 우리만 전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뒤 통수를 쳐도, 180여 국가의 한국인 입국 제한으로 한국이 지구촌의 왕따로 전락해도,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의료진이 지쳐 외국인을 치료할 여력이 없다.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애타게 호소했어도 정부는 줄기차게 모른 척한 사실을 연합은 끝내 외면했다. 취재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파고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 사태가 크게 확산된 것이나 최근 들어 기세가 주춤해졌다가도 다시 살아나곤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초기의 중국발 유입 차단 실패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급증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속셈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입국 확진자의 증가를 처음부터 막지 못한 것도 중국발 유입 차단 실패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합은 이런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장문의 기사 말미에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해 왔다”고 한 줄 붙인 게 전부다.

○ 연합이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라고 표현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들은 아예 입국을 막거나 비용까지 물려 가며 지정된 장소에 강제 격리시키고, 더 심한 곳은 아예 환승이나 경유도 불허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자가 격리를 고강도 대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이없다. 자가 격리를 어기고 군중 사이를 활보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고강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연합은 그러나 “지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해외유입 억제에 단계적으로 검역 수준을 높여온 정부가 신규 확진자가 목표한 만큼 줄지 않자 또 하나의 승부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 입장 옹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 권력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국가기간통신사가 비판의식을 내팽개치고 정부의 홍보지 내지 기관지로 전락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연합이 4.15 총선에서 편파 보도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엄정 중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 연합뉴스의 도 넘은 여당 짝사랑

“비례당 관련 민망한 보도 쏟아내”

- ▶ 민주당 참여 '더시민' 1차 당대회…"정당사 새로운 장 열었다" (3.21 17:11)
- 민주당 참여 '더시민' 1차 당대회…비례후보 공천 착수(종합) (3.21 21:49)

○ 연합뉴스의 여당 짝사랑은 그 끝이 어디인가. 선거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며 지난해 말 '4+1'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동원해 선거법 개혁을 밀어붙인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헌정 사상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개정은 처음이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양당제 폐해 근절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지만 속내는 범여권을 규합해 개헌선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4.15 총선에서 의석 80% 싹쓸이"를 당 수뇌부가 공언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당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 범여권의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당이 지난달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은 "꼼수" "위헌" "가짜 정당" 등 온갖 험담으로 맹비난을 퍼부은 것으로도 모자라 검찰에 고발까지 해싸. 이 과정에서 연합이 민주당의 논리를 충실하게 옹기 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통신기사가라기보다는 여당의 기관지였다. 그러던 민주당이 자기네도 비례당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통합당의 의석 도둑질 응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의석 80% 싹쓸이'를 외칠 땐 언제고 여권의 국회 찬탈 음모에 저항한 제1야당의 몸부림은 도둑질로 몰아붙였다. 연합은 같은 비례당이라도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뭉갠다. 때맞춰 터진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과 싸잡아 두루뭉수리로 넘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도둑질' 운운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도둑놈 주제에 자기가 경찰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비꼰 사실은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다.

○ 아무리 그래도 뉴스통신사가, 그것도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기간통신사가 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1차 당대회를 보도하면서 '정당사 새로운 장 열었다'라고 제목을 친 것은 너무 심했다. 마치 '우린 다른 것은 일체 안 본다. 당중앙만 따를 뿐'을 외치는 북한 로동신문을 보는 것 같다.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창피한 일을 가리켜 '정당사 새로운 장'이라고 꾸미다니 '이게 언론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의 모두발언이고 겹따옴표를 붙이기는 했어도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제목으로 뽑는 매체나 제정신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도 민방한지 몇 시간 뒤에 종합기사로 내보내면서 제목을 민주당 참여 <'더시민' 1차 당대회…비례후보 공천 착수>로 고쳤지만 여전히 <우희종 "정당사 새로운 장 열었다">를 부제로 다는 미련을 드러냈다.

- ▶ '비례정당' 놓고 흥역 치르는 여야…'꼼수 경쟁'에 거센 역풍(종합) (3.19 18:27)
- [연합시론] 미래한국당 손바닥 뒤집듯 비례명단 바꾸면 국민우롱 아닌가 (3.18 17:22)

○ <'비례정당' 놓고 흥역 치르는 여야... '꼼수 경쟁'에 거센 역풍>은 연합이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과 통합당의 혼선을 한데 묶어 몰타기하려고 애쓴 노력의 결과물이다. 민주당의 비례당은 원칙도 없고 신의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치의 표본이고, 통합당의 비례당은 그 나름대로 찾아낸 자구지책인 만큼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하나로 싸잡아 도매금으로 넘기기 바쁘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선거법 협상 당시의 동지들로부터 한결같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더불어민주당 창당 과정에서도 온갖 술수와 기만으로 진보 원로들을 우롱했다는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연합은 오로지 여당 기관지 노릇에 급급했다.

○ 연합은 야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고 여당은 슬그머니 농치기 일쑤다. 위의 [연합시론]은 해도 너무한, 뉴스통신사의 기사라기보다는 특정 정당 대변인의 일방적인 상대당 비난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진흙탕은 애써 외면하고 미래한국당 수뇌부의 개인적 일탈은 한껏 키웠다. 결국 미래한국당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민주당의 진흙탕은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사안의 성격이 워낙 고약해서 우리 정치사에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게 뻔한데도 연합의 인정사정없는 야당 공격과 여당 짝사랑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4.15 총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박두했다. 뉴스통신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편파 보도를 일삼으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는 뿌리째 흔들리기 마련이다. 국가기간통신사의 도 넘은 여당 짝사랑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연합 내부의 의식 있는 기자들의 동조를 끌어내야 한다. 선거만 끝난다고 해서 결코 모든 것이 유아무야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그들에게 보내야 한다.

VI. 정권나팔수와 야권 낙인찍기 계속하는 KBS <뉴스9>

- 분석 대상 KBS <뉴스 9>
- 분석 기간, 2020.03.23~2020.03.28.

1. 정권의 나팔수 보도 계속. 퍼주기 예산 성행

- 대통령 말씀, 이낙연 종로 후보 등장. 정책 설명인지, 선거운동인지.
- 비판은 없는 기사가 늘상. 청와대 출입처에서 일어난 것 뿐임.

○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핵심은 '기업 살리기'입니다. 100조 원 규모

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풀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특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유예, 면제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해달라고 주문. 현금성 지원, '긴급재난소득'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3차 회의 때 결론내겠다는 겁니다."(3.24).

▶ '코로나19' 확산 우려

긴급 구호자금 100조...재난소득 "선별 지원" 무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9170>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선전, 선동에는 진실이 없다.

2.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는 것을 선전하는 공영방송 KBS

○ 다른 목소리는 없고, 1조 3천억을 쓰는 국민혈세가 경기지사에 의해 결정, 그리고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가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저는 이게 중앙정부의 그리고 여야 중앙 정치권의 타협과 결단을 앞당기는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여 명, 소요 재원은 1조 3천 64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03. 24).

▶ '코로나19' 확산 우려

경기도, "전 도민에 1인 당 10만원 씩 지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9174>

3. KBS의 코드 인사가 드러나는 순간

○ KBS지도부가 문제를 계속 일으킴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시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8번,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방송을 총괄하던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30여 일 만에 정치권으로 직행한 겁니다. 이창현 전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KBS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던 위원장직 사퇴 이틀 뒤입니다.

역시 비판이 일자 이 전 위원장은 "KBS 외부에서 언론 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3.24).

▶ 21대 국회의원 선거

“물러나자마자 정당에 줄”...정필모 전 KBS부사장 정치권행 비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9212>

- 관련 규정 : KBS 윤리강령은 프로그램 진행자, 정치 취재와 제작 담당자는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안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은재 미래통합당 폄하

○ 의원 입법이 이은재 의원 문제만이 아닐 터인데...

“발의자인 이은재 의원이 누군가를 거론합니다. [이은재/미래통합당 의원/2019년 2월 21일 : ‘제안을 해주신 분은 김주경 회장님이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법안 제안자라는 분, 현직 법무사이자, 전 서울지방법무사회장이시네요. 선관위 자료 확인해 봤더니, 20대 국회 내내 이은재 의원 후원회장이셨네요.”(3.23).

▶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감시K] 의원과 법⑥ 왜 발의하셨나요...혹시나 로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8224>

- 관련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예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전광훈 목사 낙인찍는 일은 옳지 않다.

○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교인들은 부침개를 부쳐 나눠 먹습니다.

[교회 관계자 : ‘뭐 하는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2천 명이 몰려 야외까지 뻑뻑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03.23)..

▶ ‘코로나19’ 확산 우려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전국 교회 57.5% 현장 예배 취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8214>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조속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문 대통령 천안함 사건에 처음 참석, 국방장관 해군 사령관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가?

○ 문 대통령, 전상수당 다섯 배. 이례적 발상들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는데 천안함 사건

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은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청자/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무 중 다친 군인에게 주는 전상수당을 다섯 배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3.27).

▶ 文, 천안함 유족 물음에 “‘북한 소행’ 정부 입장에 변함 없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1842>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박사방 사건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닌데, 선거 앞두고 부각되었다.

“ 23일 2건, 24일 4건, 25일 7건, 26일 3건, 27일 4건(총 20건). 미국의 아버지 부시 때 마약과 전쟁,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 전쟁 같은 선전, 선동술일 수 있다. 확인도 되지 않는 과장보도 많다. 물타기 냄새가 난다. 4·15 선거 후보자 비리 등은 부각시키지 않았다.

▶ 검찰, 조주빈 이틀째 소환…범죄단체 성립 검토.“(3.2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1829>

- 관련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피고인·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3월 21일 21개 보도 중 12개가 코로나19에 관한 보도

- 선거보도는 하나는 정당 수가 많다는 것이,
- 다른 하나는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표심에 관심

○ KBS 뉴스는 의도적으로 선거 방송을 회피하고 코로나 선거로 몰고 갔다. 지극히 지엽적인 선거 이슈 문제 부각.

“최재성/더불어민주당 후보 : '1년 9개월만에 주민들 옆에 많이 간 것 같아요.' 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라는 대표 공약으로 보수세가 강한 고가 주택 보유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재성/더불어민주당 후보 :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자들인데요. 투기 수요가 없는, 투기 목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아나운서 출신으로 '국민 대변인'을 자칭한 통합당 배현진 후보. [배현진/미래통합당 후보 : "따뜻하게, 정말 딸처럼 자매처럼..."] 역시 종부세와 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일한 30대 후보로 젊은 유권층까지 잡겠다는

목표입니다.“(3.28).

▶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 지역구] 서울 송파을…2년 만의 재대결, ‘부동산’ 표심이 관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2242>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방송은 진실에 근거한 큰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다. 알권리를 왜곡 하고 있다. 끝.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